

# 따로 한 반세기, 함께 하는 21세기



지난 3년동안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국민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을 정리하고,

국민여러분과 함께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평화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 4 우리가 대북화해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8 우리도 어려운데 왜 북한을 도와 주는가?
- 12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왜 필요한가?
- 14 북한은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나?
- 16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 20 우리가 북한에 속거나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 24 북한이 원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 아닌가?
- 26 우리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서 서두르는 것 아닌가?
- 28 남북경제협력, 어떻게 되고 있나?
- 32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무엇이 추진되고 있나?
- 38 한·미 공조는 잘되고 있는가?
- 42 통일은 언제쯤 되는 것인가?


## 우리가 대북화해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 분단과 대립을 조장해 왔던 국제적 냉전질서는 이미 10여년 전에 사라졌다.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화, 개방과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오고 있다.

이제 어느 나라도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며,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의 지도층도 잘 알고 있다.

또한 남북간 국력 차이가 현격해졌다. 경제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며,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수적인 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으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화, 개방과 협력의  
큰 흐름 속에 있으며, 북한도 이를 거스를 수 없다**



## 남북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조심스럽게 변화의 조짐을 보여 왔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방과 변화, 그리고 남북간 화해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의 국력 신장은 반세기에 걸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민족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일 앞으로도 남북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전쟁의 위협, 이산가족의 생이별, 테러·폭과·납치 등 과거 50여년 역사 속에 점철되어진 민족의 고통과 불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제정세와 우리의 국력 신장은 통일과 민족번영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남북의 분단과 대결,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정한 평화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으며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데 장애가 되었다.

남북간 생활모습이 점차 달라지고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도 약화되는 사회적·문화적 피해도 생겨났다.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이 땅에서 먼저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한반도 전체에서 민주주의가 성숙·발전하게 될 것이며,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 겨레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대북화해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는  
민족의 미래를 위한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이다**



한마디로 대북화해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강자(强者)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며, 북한의 변화를 도와주어 평화를 얻고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는 한편,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필요한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이유이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획기적으로 진전된 남북관계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올바른 현실적 대안이다**



## 우리도 어려운데 왜 북한을 도와 주는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준다', '우리도 어려운데 북한을 도울 필요가 있는가' 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인도적 견지에서는 물론, 우리의 경제력에 견주어 볼 때 지나친 기우라 하겠다.

국제적으로 지진과 홍수 등 재해를 당한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인도적 견지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원활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3년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서 연평균 6천만달러 정도인데, 이는 우리 GNP의 연평균 0.01%에도 훨씬 못미치는 규모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지원한다' 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 인도주의적, 동포애 차원의 지원으로 남북화해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이처럼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우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올해도 대북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남북협력기금) 범위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원할 것이다.

대북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및 동포애를 구현하는 것과 함께 북한주민의 대남적대심을 약화시키고 남북화해협력을 실현해 나간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대북지원이 결코 일방적 시혜라고 볼 수 없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한반도의 안정이 무너졌을 때 감당해야 하는 손실과 비교한다면 꼭 필요한 정도의 투자라 할 수 있다.

대북지원은 일방적 시혜가 아니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필요경비이다




한편, 민간차원의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이를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 라고 하나, 이 역시 남북경협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현재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기업들이 자기 책임하에 대북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기업이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철저하게 채산성을 검토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 기업들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일방적으로 퍼다주기 위해 대북사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북한의 현실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간기업들의 지나친 과당경쟁이나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지도해 오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익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직까지 북한이 시장경제 원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으며, 북한도 우리와의 협력이 증대하면서 점차 이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우리정부가 북한과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계정·상사분쟁 해결에 대한 4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앞으로 대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이 우리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동시에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민족의 부(富)를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경협을 국민의 지지 속에 야당과 국회의 협조를 얻어 투명하고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민족의 부(富)를  
증대시키는 투자이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왜 필요한가?

남북 두 정상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 정상이 아무리 좋은 선언이나 합의를 하여도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 즉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내외에 보다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화해의 강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  
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2001년 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약 90%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면,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의 발전 상황을 직접 봄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남북간 협력관계를 보다 넓고 깊게 해 나가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된다면, 이는 앞으로 남북의 두 정상에 앞장서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확고한 틀이 정착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 북한은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나?

과거 불행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밝혀내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과거사를 해결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과거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한다면 과거 잘못에 대한 해결은 커녕, 남북관계의 진전마저 어려워짐으로써 불행했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과거문제를 성급히 해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해결해야 하나,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남북 사이에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6·25전쟁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난 55년 세월 속에 남북간에 누적되어 왔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당장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든 일에는 이를 풀어 나가는 순서와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과거 잘못에 대해 집착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은 결코 과거사를 잊거나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적·합리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북한은 지난 50여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수용',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남북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더 이상 그러한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전쟁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며, 주한미군이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야 한다' 고 설명하였고, 김정일 위원장도 이에 대해 이해를 하였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수용',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다.

-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제' 통일 방안 설명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그 현실성을 인정하고, 북측이 제기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과 같음을 인정하였다.
- 아울러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임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도 공감하였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한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에 적극 호응해 나오고 있으며, 대남 비방중상과 파괴, 전복, 긴장조성 행위를 중지하였다.





# Sydney 2000

그런가 하면 최근들어 북한은 간부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연수케 하고 있고, 2001년에 들어와서는 미국과 중국 등에 경제시찰단을 파견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중에는 우리측에 경제 시찰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2001년 새해 들어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서 새로운 사고(思考)와 방식을 강조하는가 하면, 중국 방문시 대표적 특구인 상해(上海)시를 시찰하는 등 향후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0월 조명록 특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10월 북·미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 및 관계 정상화 의지를 공식 선언하였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방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을 북한에 초청하기도 하였다. 지난 50여년 동안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제국주의' 또는 '철천지 원수'라고 비난해오던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달라진 모습이라고 하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새로운 사고(思考)와 방식'을 강조하고 중국의 개혁·개방현장을 시찰하는 등 개방과 변화로의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럽의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벨기에, 스페인,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과 수교하였고 캐나다, 호주, 필리핀, 브라질 등과도 수교하였다. 2000년 7월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미국내의 준비가 끝나면 미·북간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또 경제회생을 위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조그마한 변화의 싹을 키워서 북한이 변화의 확실한 길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의 확실한 길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 우리가 북한에 속거나 끌려 다니는 것 아닌가?

현재의 남북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쪽 주도하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백하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간 대화는 우리가 일관되게 북측에 촉구해 온 것이 실현된 것이다.

경의선 철도 및 개성-문산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 추진,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마련 등도 모두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과제들이다.

**현재 진행중인 31개 사업중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연결 등 25개가 우리가 주도하고  
북측이 응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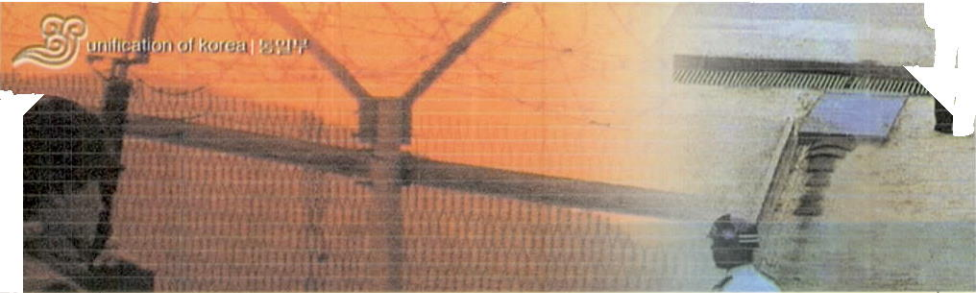
##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은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들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남북이 합의 실천하고 있는 31개 사업중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연결 등 25개가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제의하고 북측이 응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남북간 대화와 접촉, 그리고 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 시기, 장소 등 절차문제에서 부분적으로 북한측의 주장이 부각되는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저자세이거나 끌려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화해협력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것일 뿐이다.

**절차문제의 부분적 양보는 화해협력을 주도하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은 변화가 없으며, 이같은 의도를 감춘 채 일시적으로 남북화해에 응하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물론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남북간 국력차이, 그리고 우리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수준을 볼 때, 이는 지나친 우려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는 GNP와 무역규모 등 경제력에서 세계 13위에 올라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1999년 연평해전에서 보듯이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지난 50년동안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실현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지난 50년 동안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우리민족의 장래는 우리가 이끌어 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召命)이다.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가 이끌어 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召命)이다




## 북한이 원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말하듯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선물도 아니며,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법제문제로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정상회담시 김대중 대통령도 이점을 강조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공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8월 노동당 규약 개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연계하지 않을 뜻을 밝혔고, 국가보안법 개정은 남쪽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로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 인권침해 등 법 남용의 소지를 없애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성숙한 민주국가로서 우리사회 내부적으로 법 집행의 남용을 없애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은 우리의 국가보안법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매년 촉구해 왔다. 특히 이들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는데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않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에서 법개정 논의가 진행될 경우, 국가보안법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점과 남북관계 상황 및 우리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국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협조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은 남북관계 상황 및 우리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국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진될 것이다**

1972

## 우리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서 서두르는 것 아닌가?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국제사회와의 협조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되고, 뒤로 미루고 싶다고 해서 마냥 늦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현 단계에서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며, 지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아래 현 상황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분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는 민족적 과제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한 개인이나 정권의 과시성 치적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 우리는 평화공존을 목표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만, 우리민족이 처한 현실을 볼 때, 누가 언제 대북정책을 추진하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남북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21세기가 시작되었고 세계 각국이 자국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20세기에 형성된 분단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문제, 긴장완화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제사회에서 냉전이 종식된지 10여년이 지났으나 남북관계는 지난해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이제 싹을 틔우고 물꼬를 튼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그 방향이 올바르고 바람직하다면, '빠르다, 빠르지 않다'의 논쟁은 불필요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남북경제협력, 어떻게 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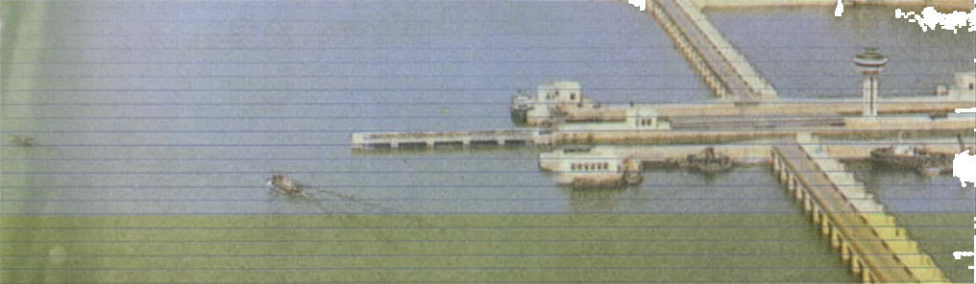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합의하였고 연이어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연결과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00년 9월 18일 우리측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 연결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남북은 군사당국자간 협의를 갖고 이와 관련한 군사적 실무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다.

철도는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24Km, 도로는 통일대교 북단에서 개성까지 17Km을 연결하는 것으로 남측 구간은 우리가, 북측 구간은 북한이 각각 담당하며,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 개성 공단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은 분단을 정신적 · 물리적으로 극복하고 민족의 대동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효과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남북간 물류비를 1/3 수준으로 대폭 절감하여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남북한 경제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 · 직접투자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경의선 철도는 중국,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 및 시베리아의 자원 개발 및 활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은 민족경제의 동맥을 잇고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0년 8월 현대와 한국토지공사는 서해안 공단 후보지로서 개성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대와 북측의 아·태 평화위원회간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그 후 현대와 한국토지공사는 1단계로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의 100만평에 대해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측은 개성공단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측에 임금·고용·토지임대·세제·송금 등과 관련한 법제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이 생산된다면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우리 경제, 특히 신발·섬유 등 사양산업의 활로를 찾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개성공단 조성은 남북경협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개성 공단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매년 대규모 홍수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임진강이 남북을 관류하는 특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치수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북측에 임진강 유역의 공동수해방지 사업을 촉구하여 왔고, 2000년 9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에 평양에서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임진강 유역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조사 대상, 조사 방법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앞으로 남과 북은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임진강과 주변지역의 강수량, 하천 수위 등 수방대책을 위한 정보 교환과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하천정비, 제방축조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함께하는 치수사업으로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남북이 함께 잘사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의미가 있다.

**임진강 수해방지는 최초로 남북이 함께하는 치수사업이다**



##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무엇이 추진되고 있나?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KOREA'의 이름으로 공동입장하였다.

이는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한반도에 넘치는 화해 분위기를 전세계인에게 알려준 의미가 있다.

또한 2000년에는 '금강산 국제랠리', '통일탁구경기대회', '전국체전 성화 금강산 채화' 등이 성사되었다.

2001년 3월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2001년 4월말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세계탁구 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스포츠경기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은 10년만의 일이다





##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에 이어, 세계탁구대회에 남북단일팀이 참가한다.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참가는 지난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그해 6월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이후 10년만의 일로 남북화해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북측의 개성과 금강산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로 함으로써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이후에는 개성지역에 대한 육로 관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 분야에서는 우리측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 방송사의 북한 현지 생방송 등 교류가 이루어졌고, 예술분야에서도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개최, 우리측 창극단의 '춘향전' 공연 등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종교행사도 개최되었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





2001년에도 남과 북은 ▲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및 8·15 광복절에 즈음한 공동 문화행사 개최 ▲ 교수·학생·문화예술인 교류 ▲ 우리측 7개 종단 지도자의 방북 ▲ 북한 관광단의 한라산 방문 ▲ 태권도 시범단의 교류 ▲ 북한 언론인의 서울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특히 남북주민들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기여함으로써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 인차가 될 것이다.

한편 이산가족 1세대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두고 주요 계기시마다 이의 해결을 북한측에 촉구하여 왔다.

이에따라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두 정상은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산가족 교류의 물꼬가 트여  
50년 맺힌 한이 풀리고 있다**



그 이후 3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서울과 평양에서 이루어져 총 3,600여명이 가족·친지를 상봉하였다.

또한, 10,000명 이상의 생사가 확인되었으며, 지난 2001년 3월에는 판문점을 통해 남북 각기 300명의 서신 교환도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같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생사 및 주소 확인,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이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제도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면회소는 남북이 설치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으나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봉면회소가 설치되면, 이산가족들이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쉽게 가족·친지들을 만날 수 있어 이산가족 교류가 활성화·정례화될 것이다.

**이제는 이산가족 교류가  
면회소 설치 등 제도화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남북 이산가족 간 영상상봉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상을 통해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이 방식은 상호 방문 등에 따르는 경비와 시간의 부담을 줄이고 상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대화 통로를 통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비생산적인 논쟁만을 계속할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를 이산가족범주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를 이산가족범주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시 납북자 및 국군포로 가족이 방문단에 포함되어 북측에 있는 가족을 상봉한 바 있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가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입장에 따라 북측을 계속 설득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입장이며, 이미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있다





## 한·미 공조는 잘되고 있는가?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우방이며 최대의 통상 파트너로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굳건한 안보동맹관계를 기초로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큰 틀에서 긴밀히 공조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미국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하겠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긴장 완화는 미국의 국익에도 긴요하다





##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우리주도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우선 미국은 자신의 국익에 따라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긴장완화는 미국의 국익에도 긴요하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정권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왔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미국 대한반도정책의 토대가 되어 온 '페리 보고서'는 유관국가는 물론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작성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 일치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 왔다.

**한·미 동맹관계는 확고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2001년 3월 7일 부시 미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중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평가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 두 정상은 한·미간 동맹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및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올해 예정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는 그동안 밝혀왔던 미국측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며, 앞으로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 가는 큰 밑그림에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부시 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지지하였다**



앞으로 우리와 미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포괄적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다.

다만,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의구심이 남아 있는 만큼 북한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이며, 앞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협의·추진함으로써 북한측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나갈 것이다.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협의·추진함으로써 북한측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나갈 것이다



## 통일은 언제쯤 되는 것인가?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당사자인 남북한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 추이가 계속 된다면 20~30년 후에는 통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일이 단순히 분단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국토나 제도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국가를 세워나가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너무도 크다는 점에서  
통일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평화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늘려가야 한다.

현 남북한의 현실로 볼 때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너무도 크다는 점에서 통일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우선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평화공존을 제도화하여 나가는 것이 '남북 연합'이다.

남북이 평화공존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늘려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이루어야 하며, 이는 '법적·제도적 통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남북한 평화공존과 경제공동체의 실현이  
통일로 가는 관건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평화가 없이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여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구현시킬 것이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로 남북의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북한 개성 지역에 공단이 만들어져 여기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물품을 생산·판매하며, 북한 주민들은 여기서 일하며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편지를 교환하며 궁극적으로 재결합하여 살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남북의 주민 누구나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보건, 환경 등 다방면에서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사실상의 통일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족구성원 모두의 의사에 따라 1국가 1정부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 가는 것이다.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 가는 것이다

